

# 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 간의 관계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 분석

이완\*, 채재은\*\*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The Moderating Effects of Birth Rate Policies between Korean Women's Values of Children and Their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Wan Lee\*, Jae-Eun Chae\*\*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achon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ach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 관계에서 출산장려정책(보육료지원, 육아휴직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 중 총 2,143명의 자료를 선택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조절회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배경변수(교육수준, 소득, 연령, 기존 자녀수)를 통제한 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상적 자녀수, 도구적 가치관과 정서적 가치관의 순으로 추가출산의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추가출산의향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반면에, '보육료 지원'은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료 지원'만이 '도구적, 정서적 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향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적인 출산을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가치관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 문화정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추가출산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녀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추가출산의향, 자녀가치관, 출산장려정책, 보육료, 육아휴직, 조절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both childcare subsidy and childcare leave policies have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women's value of children and their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The data are used from the 2015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Both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instrumental values, and emotional value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after controlling for background variables(level of education, income, age, and number of children). Second, childcare leave policy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while childcare subsidy policy has the negative effect. Third, only childcare subsidy policy has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rumental, emotional values, and the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ies enhancing the value of children should be implemented in addition to traditional birth rate policies. Furthermore, new birth rate polices are needed for those married women who have a high possibility of subsequent childbirth.

**Key Words** : Intention for subsequent childbirth, Value of children, Birth rate policies, Childcare subsidy, Childcare leave, Moderating effect

\* This article is part of research done for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Ms. Wan Lee.

Received 31 July 2017, Revised 31 August 2017  
Accepted 20 September 2017, Published 28 Sept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Jae-Eun Chae (Gachon University)  
Email: chaeja@gachon.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우리나라는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였고, 2005년에는 그 수치가 사상 최저 수준인 1.08명까지 낮아졌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을 필두로 각종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를 위한 재정도 지난 10년간(2006년~2015년) 총 80.2조원이 투자되었다[1]. 이러한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7명, 2014년 기준) 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2]. 이는 우리나라가 「루즈」, 「스티백」, 「테스타」(2006) 등이 언급한 ‘저출산의 덫’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 위축, 출산율 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과 결합하여 저출산은 노년부양비 증가, 성장잠재력 약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저출산 현상은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3]. 통계청의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에 의하면, 가임 여성은 지난 12년간(2005년~2016년) 92.7%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출산의 중심 연령대(30세~34세)에 속하는 여성 인구도 2016년부터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7. 8. 7. 조회 분석).

이와 같이 저출산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방안을 찾는 것은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모든 가임기(15세~4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장려정책 보다는 실제 임신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의 ‘추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필요하다. 통상 결혼한 후 1명의 자녀를 갖는 경우는 많지만, 육아 부담, 가계 부담 등으로 인해 추가출산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4]. 이러한 점에서 기존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고, 출산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보다는 ‘출산경험이 있는 가임여성’의 추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 만혼 현상이나 고령출산 기피 현상을 고려할 때 가임기 전체 기간(15세~49세)을 실제 출산의향이 있는 시기로 보기 어렵다[5,6]. 따라서 추가출산의향이 높은 연령대에 속하며, 최근 출산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 후 35개월 이내 시점에 있는

여성<sup>1)</sup>(이하 ‘최근 출산여성’이라 함)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 관계에서 출산장려정책(보육료지원, 육아휴직)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출산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가임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교육, 소득수준, 연령 등), 심리적 요인(자녀가치관, 양육스트레스 등)에 주로 집중해왔다. 최근에 와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은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보다는 일부 지역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인식조사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7,8,9,10]. 이에 따라 가임여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이 출산장려정책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추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에 관한 전국 단위의 최신 자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조사시점(2015년 8월~11월) 기준으로 35개월 이내 출산한 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 관계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녀가치관’에 주목한 이유는 개인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사회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요인으로서 출산장려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석대상 정책으로는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인 ‘보육료지원 정책’과 ‘육아휴직 정책’을 선택하였다. 전자는 도입 당시인 1992년에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선별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13년에 전체 만 5세 이하에게 확대되어 연간 46조원(2016년 기준)이 투입되고 있으며[11], 후자는 모성보호,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12]. 두 정책이 최근 출산여성의 추가출산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더 나아가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저출산 대응정책 수립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추가출산의향을 파악하는 기준으로서 35개월 이내를 설정한 이유는 실제 추가 출산 가능성이 높고, 분석 자료인 「201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2. 이론적 배경

그동안 출산 현상에 관해서는 인구학, 경제학, 심리학, 정치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인구학적 관점에서는 산업변화와 관련하여 인구변천 요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산업발전에 따른 자아만족, 선택의 자유, 생활양식 등의 개인적 가치관이 증시되면서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13,14]. 경제학적 관점은 경제적 효용과 비용의 관점에서 가계 예산의 제약 하에 부모 소비, 자녀의 소비 등을 고려하여 그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출산 자녀수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15]. 한편, 심리적인 접근으로서 합리적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등이 있는 데, 이 두 이론은 세부적인 측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사고과정은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가임여성의 출산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는 공통점이 있다[16]. 이외에도 성평등 제도와 규범이 출산율의 회복에 중요한 조건임을 강조하는 ‘양성평등이론[17]’, 사회 근대화가 여성의 역할 변화, 자녀 가치관의 변화 등을 통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압축적 근대성 이론[18] 등도 출산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에 기반하여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여성 연령, 학력수준, 자녀수 등), 경제적 요인(가계소득, 육아비용 등), 심리학적 요인(자녀 가치관, 양육스트레스 등), 정책적 요인(출산장려정책, 일·가정 양립 정책 등) 등을 관련 요인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주요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Previous Studies on Effects of Subsequent Childbirth Intention

	Analysis Factors	References of Previous Studies
<b>Sociodemographic Factors</b>	Age, Education, Number of Children	4, 5, 6, 8, 19, 20
<b>Economic Factors</b>	Income, Childcare Expenses.	4,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b>Psychological Factors</b>	Stress of Childcare, Value of Children	28, 32, 33, 34, 35, 36, 37
<b>Policy Factors</b>	Birth Rate Policies	6, 7, 8, 9, 11, 22, 28, 34, 35, 38, 39, 40

주: 선행연구에 있는 번호는 본 논문의 참고문헌 번호를 의미함.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초혼 연령이 상승되면서 추가출산의향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5,19]. 초혼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첫 출산 시기도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추가 출산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은 출산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경제활동도 활발해지고, 그에 따라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자녀를 갖더라도 소수의 자녀만을 갖게 되는 경향이 커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선행연구에서는 ‘기존 자녀수’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4,6,8]. 첫째 자녀의 경우 보통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많은 부부들이 느끼고 가족들의 압력도 큰 반면에, 둘째 자녀부터는 부부의 ‘선택 사항’이라고 보는 관점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셋째 자녀부터 각종 혜택을 주던 출산장려정책을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20].

둘째,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가계소득, 육아비용, 기타 가족부양비 등도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의 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출산 의향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21,22,23]. 실제 최근에 언론 등에서 언급되는 “다자녀가 부(富)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암시하듯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발적인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부모의 높은 교육열과 높은 사교육비는 자녀당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켜 추가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24,25,26,27,28]. 이와 더불어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고령부모 부담비율이 증대하면서 출산 부부 등에 대한 가족 지원 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4,29]. 즉 50대~60대 부부의 경우 고령의 부모 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자녀 육아를 지원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30,31].

셋째, ‘심리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감, 그리고 자녀가치관, 이상적 자녀수 등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가족의 보편화로 인해 자녀 양육 부담이 산모에게 주로 몰리면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고, 그로 인해 추가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28,32]. 이러한 문제들은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제 외에도 ‘배우자 육아휴직제’ 등과 같은 육아지원정책이 활성화될 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33,34].

다음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5,36]. 자녀가치관은 자녀에

대한 경제·사회·심리적 측면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가치”는 자녀가 어렸을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물질적 이익과 비용을 말하고, ‘사회적 가치’란 자녀를 가짐으로써 사회에서 얻게 되는 이익과 불이익을 의미하며, ‘심리적 가치’란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는 행복, 즐거움, 스트레스 등의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37].” 다수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녀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가치에 대한 관점이 출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35,36]. 즉 자녀가 주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할수록 추가출산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요인’을 살펴보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는 정책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보편화된 출산장려정책인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제도와 출산의향간의 관계를 주로 탐색했는데, 연구 대상과 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육아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추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6,11]도 있는 반면에, 보육료 지원이 추가출산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8,38]. 한편 육아휴직으로 인해 전담 육아시간 확보가 가능해져서 추가출산의향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는 반면에[9,22,34,39,40], 직장 여성의 추가출산의향을 높이는 데는 유의한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6,28]. 이와 같이 혼재된 결과들은 몇몇의 정책만으로 추가출산의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일·가정 양립문화의 확산, 출산친화적인 고용정책, 양성평등적인 가사분담 및 양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28,35].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추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있지만, 대부분 가임여성 전체(15세~49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만혼 현상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 사이에 출산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추가출산의향 여부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실제 추가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층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출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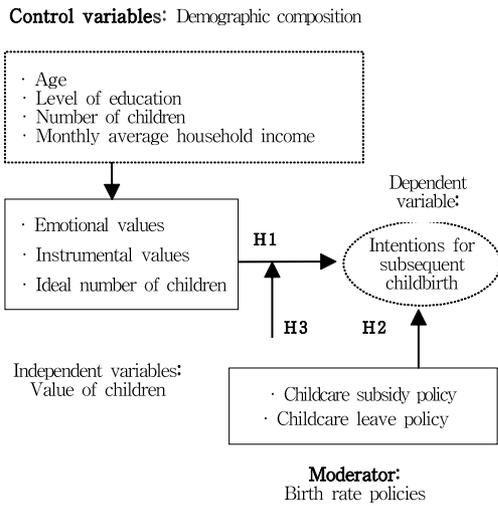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결과물이다. 동 자료는 가구의 출산 및 결혼과 관련된 실태와 의식 변화, 그리고 이와 연관된 보건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39]. 동 자료에는 선행연구들이 주목한 출산 영향 요인(인구사회학적 특성, 자녀가치관, 출산지원정책 이용 경험 등)과 출산 현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출산한 여성의 추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 자료의 총 표본은 기혼여성(15세~49세) 1만 1,009명과 미혼 남녀(20세~44세) 2,383명이다. 이 중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여성은 총 2,163명이지만, 그 중 법적으로 임신·출산이 인정받는 기혼여성 2,143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3.2 연구 모형

최근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 관계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최근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은 추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이들의 추가출산의향에 출산장려정책 이용 여부는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최근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이 추가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출산장려정책(보육료 지원, 육아휴직제도)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 그리고 출산장려정책 이용 경험과 추가출산의향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출산장려정책 이용 경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절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통계 분석을 위해서 SPSS Ver. 21.0을 사용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 3.3 연구변수

#### 3.3.1 종속변수

추가출산의향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현재 임신은 제외)”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동 문항의 경우 추가출산의향의 강도(intensity)를 파악할 수 있는 3가지 응답(낳을 생각임[3], 생각중[2], 낳지 않을 것임[1])이 가능하여 Likert식 3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 3.3.2 독립변수

분석 자료 중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관과 도구적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총 6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법(직접 오블리민)을 적용한 결과, KMO 척도는 .672, Bartlett 검정결과 카이제곱은 2542.4,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결과, 자녀가치관은 2개의 요인(정서적 가치관과 도구적 가치관)으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다. ‘정서적 가치관’ 요인은 3개의 문항(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임,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 줌,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로움)으로 구성되었고, Cronbach's  $\alpha$  값은 .669이었다. ‘도구적 가치관’ 요인은 3개의 문항(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

이 됨,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둬,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임)으로 구성되었고, Cronbach's  $\alpha$  값은 .675이었다.

그리고 ‘이상적 자녀수’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1개 문항(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을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를 Likert식 3점 척도(1자녀 이하[1], 2자녀[2], 3자녀 이상[3])를 활용하여 재코딩하였다.

#### 3.3.3 조절변수

최근 출산여성의 추가출산의향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의 이용경험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였다. 두 정책 모두 출산기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육아비용 부담’과 ‘육아시간 부족’ 문제를 각각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보편적인 출산장려 정책이다.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모두 활용할 수 있으나,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자료에는 각 정책의 이용경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문항별 답변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 3.3.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추가출산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4개 변수(교육, 연령, 기존 자녀수, 소득)를 활용하였다[9,29,41]. 연령은 변수 값을 6개 구간(25세미만,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40세~44세, 45세~49세)으로 분류하였고, 교육 수준은 4개 구간(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대학교, 대학원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가구소득 수준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소득(427만원)’을 100%로 설정하여 7개 구간(60%미만, 60%~80%미만, 80%~100%미만, 100%~120%미만, 120%~140%미만, 140%~160%, 160%이상)으로 재분류<sup>2)</sup>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자녀수’는 조사대상 여성별 총 출생아수로, 4개 구간(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2)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가구소득 계층 분류 활용

## 4. 연구 결과

###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2,143명)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

	Frequency	%	
Age	Under 25	66	3.1
	25~29	361	16.8
	30~34	995	46.4
	35~39	599	28.0
	40~44	114	5.3
	45~49	8	0.4
Level of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29	1.4
	High school	507	23.7
	University	1,478	69.0
	Grad. school	129	6.0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Missing values: 2)	Less than 60 %	329	15.4
	60%~80%	476	22.2
	80%~100%	451	21.0
	100%~120%	286	13.3
	120%~140%	214	10.0
	140%~160%	136	6.3
Number of children	More than 160 %	249	11.6
	1	969	45.2
	2	906	42.3
	3	243	11.3
	More than 4	25	1.2
Intentions for childbirth	No	1,330	62.1
	Maybe	223	10.4
	Yes	590	27.5
Total	2,143	100.0	

먼저 연령을 살펴보면 30세~34세가 995명(46.4%)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35세~39세(28.0%), 25세~29세(16.8%)의 순으로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출산연령도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수준은 대학 학력이 69%이고, 대학원 학력이 6%로서, 표본의 75%가 고학력 자임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의 경우,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소득(427만원)을 100%로 산정하여 분석한 결과, 60%~80%미만(257만원~341만원) 476명(22.2%), 80%~100%미만(342만원~427만원) 451명(21%)의 순으로 많았다. 자녀수의 경우 1자녀가 969명(45.2%)으로 가장 많았고, 2자녀가 906명(42.3%)이었다. 추가출산의향

은 '있음' 590명(27.5%), '고려 중' 223명(10.4%), '없음' 1,330명(62.1%)이었다. 한편,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추가출산의향'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는 30세~34세, 교육 수준은 대학 학력, 현 자녀수는 1명, 월평균소득은 60%~80%(257만원~341만원) 구간에 속하는 층이 추가출산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정책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보육료를 지원받은 여성은 1,336명(62.3%), 육아휴직 이용 여성은 456명(21.3%)이었다.

### 4.2 분석 결과

#### 4.2.1 자녀가치관에 따른 추가출산의향

최근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이 추가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에서 분산의 유의확률이  $p < .001$ 로 회귀식이 유의하며 Durbin-Watson 계수가 1.970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 없이 잔차의 독립성이 확보되었고,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Value of Children →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B	SE	$\beta$	t	B	SE	$\beta$	t
Constant	30.460	1.030		29.577	23.782	1.175		20.235
Income	.217	.092	.047	2.352	.224	.089	.048	2.519
Education	-.003	.003	-.020	-1.014	-.004	.003	-.023	-1.208
Age	-.014	.002	-.137	-6.883	-.013	.002	-.127	-6.614 *
No. of children	-5.611	.242	-.455	-23.172	-6.101	.236	-.495	-25.831 *
Emotional values					.570	.191	.057	2.989 *
Instrumental values					.793	.199	.077	3.989 *
Ideal number of children					.033	.003	.197	10.761 *
F			185.701***				138.528***	
$R^2 / Adj. R^2$			.260 / .259				.315 / .312	
Durbin-Watson				1.970				

\*  $p < .05$ ; \*\*  $p < .01$ ; \*\*\*  $p < .001$ .

통계변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자녀수가 적고( $\beta = -.455, p < .001$ ), 연령이 낮을수록( $\beta = -.132, p < .001$ ), 추가출산의향이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계소득은 높을수록( $\beta = .047, p < .05$ )

유의했으나 교육은 유의하지 않았다[42].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는 ‘이상적 자녀수’가 추가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19.7%( $\beta = .197$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도구적 가치관’ 7.7%( $\beta = .077$ ), ‘정서적 가치관’ 5.7%( $\beta = .057$ )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치관이 추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28, 35,36,43]. 한편, 추가출산의향에 정서적 가치관 보다 ‘도구적 가치관’이 더 영향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최초의 출산과 추가 출산에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는 도구적 가치보다 ‘정서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와 10개월 이하 영아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도구적 가치’가 ‘정서적 가치’ 보다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이는 추가 출산의 경우, 최초 출산보다는 육아 부담과 기회비용(경력 단절 등) 등을 더 많이 고려하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도구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 4.2.2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제도 이용여부에 따른 추가출산의향

출산장려정책(보육료 지원, 육아휴직) 이용여부가 추가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Durbin-Watson 계수가 1.928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 없이 잔차의 독립성이 확보되었고,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서 분산의 유의확률이  $p < .001$ 로, 회귀식을 통해 추가출산의향을 예측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수가 적고( $\beta = -.454$ ), 연령이 낮을수록( $\beta = -.140$ ) 추가출산의향이 높아지는 반면에( $p < .001$ ), 가계소득과 교육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식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7.2%( $adj. R^2$ )이다. ‘보육료 지원’ 이용 여부( $p < .001$ )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보육료 지원정책 이용여부가 추가출산의향에 미치는 효과는 -13.5%( $\beta = -.135$ )로 나타났으며, 음(-)의 상관 결과가 나온 것은 본 연구와 동일한 자료로 출산 여성의 출산자녀수별 추가출산의향을 분석한 이광호의 연구와 일치한다[38]. 이러한 결과는 보육료 지원을

받는 여성 중에 ‘전업주부’에 비해 추가출산 회피경향이 높은 ‘직장여성’ 비율이 높을 수 있으며, 또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비용지원이 추가출산에 따른 총체적인 아동양육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 있다[44].

다음으로, ‘육아휴직 이용’은  $p < .05$ 를 초과한 .054로, 추가출산의향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이용여부가 추가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3.9%( $\beta = .039$ )이었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출산의향에 대한 육아휴직의 효과는 불일치하는 편이다. 2013년 여성가족패널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1-9차년도를 활용한 연구들에서는 육아휴직 제공여부가 출산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15, 33]으로 나타난 반면에, 일부 연구에서는 출산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28,35,45]. 이러한 불일치는 해외연구 결과에서도 발견된다. 2005년 OECD 22개 회원국의 아동양육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육아휴직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46] 반면에, 일부의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효율적인 육아휴직은 추가 출산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4,41]. 이러한 차이는 육아휴직제도만으로는 취업한 여성들이 겪는 양육부담은 쉽게 줄어들지 않으며[47], 근로형태의 유연화, 경력연속성 보장 등 추가출산을 지원하는 기타 요인들이 보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able 4> Childcare Subsidy Policy, Childcare Leave Policy →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B	SE	$\beta$	t	B	SE	$\beta$	t
Constant	30.599	1.061		28.848	30.772	1.054		29.186
Income	.194	.092	.042	2.098	.121	.097	.026	1.238
Education	-.003	.003	-.018	-.928	-.003	.003	-.019	-.984
Age	-.014	.002	-.140	-7.033	-.014	.002	-.142	-7.170 ***
No. of children	-5.591	.243	-.454	-22.971	*-4.680	.285	-.380	-16.446 ***
<b>Childcare subsidy</b>								
					-2.452	.406	-.135	-6.039 ***
<b>Childcare leave</b>								
					.835	.433	.039	1.928
F	183.669***				130.982***			
$R^2 / adj. R^2$	.260 / .259				.274 / .272			
Durbin-Watson :				1.928				

\*  $p < .05$  ; \*\*  $p < .01$  ; \*\*\*  $p < .001$

4.2.3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

(1) 보육료 지원정책의 조절효과

최근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 관계에서 보육료 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배경변수(소득, 교육, 연령, 출생아수)를 통제한 후(모형1),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와 같이 모든 모형의 유의 확률이 .000으로, 연구모델에 적합한 회귀식을 구성하고 있다.

정서적 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간의 관계에서 보육료 지원정책 이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모형의 Durbin-Watson 계수의 값은 1.957로 종속변수와 자기상관 없이 잔차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공선선 통계량 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F 값의 변화량이 유의수준  $p < .05$ 를 만족시키고, 정서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B = 1.016$ ) 추가출산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2$  값이 모형 2(.270)에서 모형 3(.282), 모형4(.284)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보육료지원정책 이용 여부가 정서적 가치관이 추가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5> Moderating Effects of Childcare Subsidy Policy

Independent variables	Step	Coefficient			Durbin-Watson	F
		B	$\beta$	t		
Emotional values	constant	30.505				
	1					185.6***
	2	1.016	.103	5.520***		156.6***
	3	1.023	.103	5.605***		139.1***
		-2.457	-.135	-6.166***		
	4	1.556	.157	5.270***		1.957 120.2***
		-.249	-.137	-6.263***		
		-.861	-.069	-2.295*		
	constant	30.505				
	1					185.6***
	2	1.170	.114	6.117***		158.5***
3	1.173	.114	6.187***		140.7***	
	-2.451	-.134	-6.158***			
4	1.779	.173	5.912***		1.949 121.9***	
	-.250	-.137	-6.293***			
	-1.003	-.076	-2.591***			
constant	30.680					
1					185.6***	
2	.035	.210	11.391***		183.5***	
3	.035	.209	11.448***		161.8***	
	-2.404	-.132	-6.12***			
4	.040	.239	8.122***		1.980 139.0***	
	-.619	-.034	-.661			
	-.008	-.108	-1.314			

$p < .05$  :  $p < .01$  :  $p < .001$

<Table 6> Moderating effects of childcare subsidy policy between Emotional values &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Model	R	R <sup>2</sup>	Adj R <sup>2</sup>	SE	Statistical variation				
					$\Delta R^2$	$\Delta F$	df1	df2	p
1	.509 <sup>a</sup>	.259	.258	7.591	.259	185.6	4	2123	.000
2	.519 <sup>b</sup>	.270	.268	7.539	.010	30.4	1	2122	.000
3	.531 <sup>c</sup>	.282	.280	7.474	.013	38.0	1	2121	.000
4	.533 <sup>d</sup>	.284	.282	7.467	.002	5.2	1	2120	.022

- a.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 b.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Emotional values
  - c.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Emotional values, Childcare subsidy policy
  - d.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Emotional values, Childcare subsidy policy, Emotional values\*Childcare subsidy policy
- \* Control variables: Income, Education, Age, No. of children

<Table 7> Moderating Effects of Childcare Subsidy Policy between Instrumental Values &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Model	R	R <sup>2</sup>	Adj R <sup>2</sup>	SE	Statistical variation				
					$\Delta R^2$	$\Delta F$	df1	df2	p
1	.509 <sup>a</sup>	.259	.258	7.591	.259	185.6	4	2123	.000
2	.522 <sup>b</sup>	.272	.270	7.527	.013	37.4	1	2122	.000
3	.534 <sup>c</sup>	.285	.283	7.462	.013	37.9	1	2121	.000
4	.536 <sup>d</sup>	.287	.285	7.452	.002	6.7	1	2120	.010

- a.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 b.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Instrumental values
- c.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Instrumental values, Childcare subsidy policy
- d.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Instrumental values, Childcare subsidy policy, Instrumental values\*Childcare subsidy policy

도구적 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 관계에서 보육료지원정책 이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모형의 Durbin-Watson 계수의 값은 1.949로 종속변수와 자기상관 없이 잔차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공선선 통계량 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앞서 살펴본 정서적 가치관과 마찬가지로, '도구적 가치관'도 F 값의 변화량이 유의수준이  $p < .01$ 을 만족시키며,  $R^2$  값이 모형1(.259), 모형2(.272), 모형3(.285)에서 모형4(.287)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보육료 지원정책 이용여부가 추가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음(-)의 상관을 보인 상황에서 상호작용항의 결과가 음(-)이 나온 것은 보육료지원의 조절효과가 추가출산의향의 양(+)의 영향을 약화시킴(buffering effect)을

의미한다. 즉, 보육료 지원정책은 최근 출산여성의 정서적, 도구적 자녀가치관이 추가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약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이상적 자녀수'의 경우 단계 4에서 조절효과의  $R^2$  변화량은 약간 있으나,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모형에서  $F$  값의 변화량이 유의수준이  $p < .05$ 를 초과한 .189로, 4단계 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참조). 따라서 이상적 자녀수와 추가출산의향의 관계에서 보육료 지원정책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8> Moderating Effects of Childcare Subsidy Policy between Ideal Number of Children &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Model	R	R <sup>2</sup>	Adj. R <sup>2</sup>	SE	Statistical variation				
					ΔR <sup>2</sup>	ΔF	df	dZ	p
1	.511 <sup>a</sup>	.261	.260	7.605	.261	185.6	4	2101	.000
2	.551 <sup>b</sup>	.304	.302	7.382	.043	129.7	1	2100	.000
3	.562 <sup>c</sup>	.316	.314	7.319	.012	37.4	1	2099	.000
4	.563 <sup>d</sup>	.317	.315	7.318	.001	1.7	1	2098	.189

- a.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 b.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Ideal number of children
- c.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Ideal number of children, Childcare subsidy policy
- d.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Ideal number of children, Childcare subsidy policy, Ideal number of children\*Childcare subsidy policy

## (2) 육아휴직제도의 조절효과

최근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 관계에서 육아휴직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배경변수를 통제(단계 1)한 후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9>와 같이 모든 모형의 유의 확률이 .000으로, 연구모형에 적합한 회귀식을 구성하고 있다.

정서적 가치관이 추가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육아휴직 정책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Table 10>에 제시하였다. 조절효과분석 결과, '정서적 가치관'은 4단계 모형에서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였을 때, Durbin-Watson의 값은 1.924로 종속변수와 자기상관 없이 잔차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모든 공선성 통계량 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F$  값의 변화량이 유의수준  $p < .05$ 를 초과한 .203이며,  $R^2$ 의 변화도 4단계 모형에서만 .001이 증가하였다.

<Table 9> Moderating Effects of Childcare Leave Policy

Independent variables	Step	Coefficient			Durbin Watson	F
		B	β	t		
Emotional values	constant	30.584				
	1					185.6***
	2	.997	.101	5.388***		156.2***
	3	.993	.100	5.369***		130.5***
		.567	.027	1.316		
	4	1.114	.113	5.359***	1.924	112.1***
		.585	.027	1.358		
		-.576	-.027	-1.273		
Instrumental values	constant	30.584				
	1					185.6***
	2	1.176	.115	6.139***		158.6***
	3	1.174	.114	6.125***		132.5***
		.574	.027	1.334		
	4	1.253	.122	5.792***	1.918	113.6***
		.572	0.27	1.331		
		-.367	-.017	-.790		
Ideal number of children	constant	30.660				
	1					184.8***
	2	1.176	.115	6.139***		181.8***
	3	.034	.207	11.210***		152.0***
		.604	.028	1.422		
	4	.035	.210	9.973***	1.951	130.2***
		1.090	.051	.656		
		-.002	-.024	-.303		

$p^* < .05$  :  $p^{**} < .01$  :  $p^{***} < .001$

<Table 10> Moderating Effects of Childcare Leave Policy between Emotional Values &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Model	R	R <sup>2</sup>	Adj. R <sup>2</sup>	SE	Statistical variation				
					ΔR <sup>2</sup>	ΔF	df	dZ	p
1	.511 <sup>a</sup>	.262	.260	7.579	.262	185.6	4	2096	.000
2	.521 <sup>b</sup>	.272	.270	7.529	.010	29.0	1	2095	.000
3	.522 <sup>c</sup>	.272	.270	7.528	.001	1.7	1	2094	.188
4	.522 <sup>d</sup>	.273	.270	7.527	.001	1.6	1	2093	.203

- a.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 b.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Emotional values
- c.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Emotional values, Childcare leave policy
- d.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Emotional values, Childcare leave policy, Emotional values\*Childcare leave policy

'도구적 가치관'과 '이상적 자녀수'가 추가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보육료지원정책이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Table 11, 12>에 제시하였다. '도구적 가치관'은 4단계 모형에서 상호작용항을 추가하

였을 때,  $F$  값의 변화량이 유의수준  $p < .05$ 를 초과한 .429를, 그리고 ‘이상적 자녀수’는 유의수준  $p < .05$ 를 초과한 .762로, 둘 다 유의하지 않았으며  $R^2$ 의 변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육아휴직 이용은 자녀가치관이 추가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보육료 지원’과 달리, ‘육아휴직’의 경우 효과가 없는 것은 두 정책 모두 출산장려 목적이 있지만, 세부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 지원의 경우 대상자가 선택할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보육료 부담 완화라는 공통 효과가 있으나, 육아휴직의 경우 개인 간 직장환경, 고용여건 등의 영향에 따라 신청 가능성 자체가 다르고, 승진, 경력개발, 직장복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직장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Table 11> Moderating Effects of Childcare Leave Policy between Instrumental Values &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Model	R	R <sup>2</sup>	Adj. R <sup>2</sup>	SE	Statistical variation				
					ΔR <sup>2</sup>	ΔF	df	d/2	p
1	.511 <sup>a</sup>	.262	.260	7.579	.262	185.6	4	2096	.000
2	.524 <sup>b</sup>	.275	.273	7.514	.013	37.6	1	2095	.000
3	.525 <sup>c</sup>	.275	.273	7.512	.001	1.78	1	2094	.182
4	.525 <sup>d</sup>	.275	.273	7.513	.000	.6	1	2093	.429

- a.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 b.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Instrumental values
- c.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Instrumental values, Childcare leave policy
- d.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Instrumental values, Childcare leave policy, Instrumental values\*Childcare leave policy

<Table 12> Moderating Effects of Childcare Leave Policy between Ideal Number of Children &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Model	R	R <sup>2</sup>	Adj. R <sup>2</sup>	SE	Statistical variation				
					ΔR <sup>2</sup>	ΔF	df	d/2	p
1	.512 <sup>a</sup>	.263	.261	7.597	.263	184.7	4	2075	.000
2	.552 <sup>b</sup>	.305	.303	7.379	.042	125.6	1	2074	.000
3	.553 <sup>c</sup>	.305	.303	7.377	.001	2.0	1	2073	.155
4	.553 <sup>d</sup>	.305	.303	7.379	.000	.1	1	2072	.762

- a.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 b.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Ideal number of children
- c.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Ideal number of children, Childcare leave policy
- d. predictor (constant), Control variables, Ideal number of children, Childcare leave policy, Ideal number of children \*Childcare leave policy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인구절벽의 위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최근 출산한 여성의 자녀가치관이 추가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조절회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동 조사에는 기혼여성(15세~49세) 1만 1,009명이 참여하였으나, 추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좀 더 세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35개월 이내 출산한 2,143명의 기혼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분석 결과, 배경변수(교육수준, 소득, 연령, 자녀수)를 통제한 후 출산여성의 이상적 자녀수, 도구적 가치관, 정서적 가치관의 순으로 추가출산의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이용’은 추가출산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보육료 지원’은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료 지원정책’만이 정서적, 도구적 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육아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외에도 ‘자녀의 중요성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출산장려 문화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16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가족’은 변함없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48]. 출산이 개인의 선택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젊은 부부들의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책은 출산을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출산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추가출산을 저해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료지원정책은 추가출산요인에 대해 음(-)의 상관을 보였고, 육아휴직제도는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제도가 추가출산의향을 갖는 데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추가출산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타 조건’이 같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육아 비용지원과 시간 부여만으로 충분하

지 않고, 추가출산을 장려하는 직장 문화, 적절한 가사 및 육아 분담, 교육비 지원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49]. 이외에도 효율적인 출산을 제고와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출산한 여성들'의 추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별도의 학술적,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최근 출산여성의 평균 연령이 31세~34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추가 출산은 고령출산 위험을 줄여서 건강한 영아 출산율을 제고할 가능성이 높다[50]. 따라서 이들의 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출산정책 수립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최근 출산 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조사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달리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관'이 '정서적 가치관' 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한 후 비교적 단기간(2년~3년)에 또 다른 출산을 고려할 때, 김정석의 연구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자녀를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효용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고려를 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4]. 즉, 30대 초반의 최근 출산 여성의 경우, 추가출산을 고려할 때 교육비 이외에도 대학까지 소요되는 교육비, 보다 큰 주택으로의 이전비, 경력단절로 인한 기회비용 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국가 차원과 지자체 차원의 출산정책 수립 시 가임기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출산장려정책 외에도 비교적 최근에 출산한 여성들이 추가출산과 관련하여 고려할 교육, 주택, 근로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추가출산으로 인한 부담들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때, 자녀에 대한 정서적, 도구적 가치관도 높아져서 출산율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출산에 관한 최신 빅데이터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출산한 여성들의 추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양적 연구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 근로환경적 요인, 정책요인간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은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후속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REFERENCES

- [1]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Low Birth Rate Measures 1", p.92, 2016.
- [2] OECD, "Fertility Rates (indicator). doi: 10.1787/8272fb01-en", August 7, 2017.
- [3] Lutz, W., Skirbekk, V. & Testa, M. R. "The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 Forces that may Lead to Further Postponement and Fewer Births in Europe",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Vol. 4, pp.167-192, 2006.
- [4] J. S. Kim, "Parity Specific Approach to the Plan of Having an Additional Child",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0, No. 2, pp.97-116. 2007.
- [5] S. S. Lee, H. J. Cho,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hange in Life Course and Fertility Behavio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107, 2010.
- [6] S. H. Chung,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5, No. 1, pp.31-52, 2012.
- [7] H. K. Kim, S. W. Lim, R. R. Lee, S. H. Park, D. S. Go, H. N. Na, K. S. Lee, H. S. Rhee. "The Survey Research on Pregnant Woman's Recognition about GO-UN-MAM CARD of Childbirth Promotion Poli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3, pp.241-250, 2012.
- [8] Y. O. Han, "A Study of the Impact of the Rearing Support Policies on the Willingness of Childbirth." Ph. D. dissertation, Kyungwon University, 2012.
- [9] H. J. Ju, K. H. Kwak, J. Y. Jo, "Effects of Social Economic Factors and Policy-Based Factors on Childbirth Intentions",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Vol. 24, No. 4, pp.211-228, 2010.
- [10] I. O. Kim, H. J. Wang, G. C. Jung, S. Y. Choi, "The Effect of Policy on Childbirth Encouragement and Working Time on Secondary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4, No. 3, pp.139-155, 2011.
- [11] S. H. Lee, C. H. Lee, S. C. Hong, "Impact

- Evaluation of Korea's Pro-natal Polici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166, 2016.
- [12] KDI, "Maternity Leave/Support Program for Childcare Leav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p. 58, 2009.
- [13] McDonald, P. "Gender Equ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Studies*, Vol. 17, No. 1, pp.1-15, 2000.
- [14] Van de Kaa, D. J. "The Idea of a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Industrialized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the Sixth Welfare Policy Semina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pp.1-33, Tokyo, Japan, 29 January, 2002.
- [15] Blau, D. M., Robins, P. K. "Fertility, Employment, and Child-care Costs", *Demography*, Vol. 25, No. 2, pp.287-299, 1989.
- [16] Fishbein, M., Ajzen, I.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 Addison-Wesely, 1975
- [17] Neyer, G., Vignoli, D., Lappegård, T. "Gender, Economic Conditions and Fertility. Does Context Matter for Fertility Intentions". In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Annual Meeting*, Washington, DC, March, 2011.
- [18] K. S. Chang, "Family, Life, Political Economy", Changbi Publishers, p.15, 2009.
- [19] K. S. Eun, "Age at Marriage, Marriage Cohort and First Birth Interval",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35, No. 6, pp.105-139, 2001.
- [20] D. S. Kim, "Provide a Second Child Family with the Benefits of Multiple-Child Family Including Special Housing Provision Progra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1/201706210036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1/2017062100362.html), July 10, 2017.
- [21] Becker, G. S.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A Conference of the Universities-National Bureau Committee for Economic Research, Columbia University Press, pp.209-240, 1960.
- [22] S. H. Kim, "The Effect of Female Worker's Working Conditions on Fertility", *Social Welfare Policy*, Vol. 36, No. 2, pp.113-137, 2009.
- [23] E. J. Kim, S. L. Lee, W. J. Lee, H. N. Kim, "Study on the Fertility and Childcare Behavior by Income Group and Policy Directio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145, 2011.
- [24] Y. J. Shin, T. Y. Sung, E. Y. Choi, "The Burden of Childcare and Education Expenses Affecting Childbirth."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215, 2008.
- [25] E. H. Joung, Y. S. Choi,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Birth Plan for Second Child and Second Birth for Married Women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3, No. 1, pp.5-34, 2013.
- [26] J. G. Ha. "Economic Analysis of Low Fertility in Korea", *Kor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9, pp.137-173, 2012.
- [27] Becker, G.S., H.G. Lewis.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No. 2, pp.279-288, 1973.
- [28] C. H. Park, "The Effects of Childcare Support, Value of Childr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Second Childbirth Plans for Employed Mothers with An Infant of 10 Months or Younger",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1, No. 1, pp.95-111, 2012.
- [29] S. S. Lee, H. J. Cho, H. S. Yoon, "Family Change and Its Impact on Marriage and Fertili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5.
- [30] H. S. Jeon. "The Effects of Familism and Sense of Intimacy to Older Parents on Filial Responsibility of Korean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5, pp.501-506, 2016.
- [31] S. G. Lee, "Factors Affecting Baby Boomer's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73-86, 2014.
- [32] M. J. Seo, "The Effects of Parent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n Follow-up Planned Childbirth:

- Focused on Family with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Policy*, Vol. 5, No. 1, pp.127-148, 2011.
- [33] J. W. Lee, K. E. Kim, W. S. Lim, “Family and Child Factors Affecting the Second Childbirth Plan in One Child Family: Focus on the Family Environments and Children’s Daily Habit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 9, No. 2, pp.1-22, 2015.
- [34] Duvander, A. Lappégard, T., Andersson, G. “Family Policy and Fertility: Fathers’ and Mothers’ Use of Parental Leave and Continued Childbearing in Norway and Swede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 20, No. 1, pp.45-57, 2010.
- [35] J. W. Lee, “A Pathway Analysis on Determination of Intention of Second Childbirth in Working Women with a Child: Focused on Value Factors”, *Korea Journal of Welfare*, Vol. 40, No. 1, pp.323-351, 2009.
- [36] M. J. Ma,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ention and the Avoidance of Second Childbirth of Working Couples”, *Korea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 5, No. 1, pp.75-116, 2008.
- [37] Arnold, F., Bulatao, R.A., Buripakdi, C., Chung, B. J., Fawcett, J. T., Iritanni, T., Lee, S. J., & Wu, T. S. “Value of Children : A Cross-National Study”, Honolulu: East-West Center, Vol. 1, p.222-p.2, 1975.
- [38] G. H. Lee, “Factor Affecting the Additional Maternity Intent of Married Woman According to the Number of Childbirths”, M.A.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p.126, 2017.
- [39] S. S. Lee, J. S. Park, S. Y. Lee, H. J. Choi, M. Y. Young, “The 2015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5.
- [40] M. S. Kim, “Fertility Intention by Childcare Leave System of Working Couple”, M.A.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15.
- [41] Lappégard, T. “Family Policies and Fertility in Norway.”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 26, pp.99-116, 2010.
- [42] Y. J. Song, “An Analysis of Married Women’s Fertility Plan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 25, No. 3, 2014.
- [43] Y. H. Ju, E. S. Jung, M. S. Shim, “The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Value on Marriage, Children and Sexual Attitud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 pp.267-278, 2013.
- [44] M. S. Jang, H. S. Yang. “Study on the Influence of Childbirth Promotion Policy Due to Postpartum Care and Maternity Leave to Economical Activities in the Era of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0, pp.245-254, 2015.
- [45] M. O. Lee, S. J. Myung,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birth Promotion Policy: A Case of Uiryeong-Gun, Gyeongsang nam-do”,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 29, No. 1, pp.331-350, 2015.
- [46] Y. K. Ryu, “A Comparative Study on Effect of Welfare States’ Childcare Support Systems on Total Fertility Rate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 21, No. 3, pp.233-261, 2005.
- [47] A. N. Kim, Y. S. Kwon, “Effect of Employed Mother’s Work-Mother Role Conflict on Parenting Stress: Mediation Effect of Parental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375-384, 2014.
- [48] MCST, “Report on Survey of Koreans’ Consciousness and Value in 2016”,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330-p.21, 2016.
- [49] M. K. Moon, B. T. Kim, H. Y. Kim,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Childcare Leave of Public Servants in Local Government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p.112, 2015 .
- [50] J. S. Hong. “Maternal Age and Infant Mortality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9, pp.379-387, 2016.

이 완(Lee, Wan)



- 2015년 3월 ~ 현재 :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복지행정 및 정책
- E-Mail : purewan@korea.kr

채 재 은(Chae, Jae Eun)



- 2006년 9월 ~ 현재 :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복지행정, 평생교육, 개발협력
- E-Mail : chaeja@gachon.ac.kr